

칼럼



장기채 주필

‘고령사회’ 패러다임 이대로 좋은가

고령화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가릴 것 없는 세계적인 추세다. 프랑스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행되는 데 115년이 걸렸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는 40년이 소요될 예정이다. 독일은 각각 40년과 37년, 미국은 73년과 21년이 걸렸다고 한다.

2006년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어 일본은 24년과 12년이 경과했다. 한국은 고령사회 18년, 또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어 겨우 8년이다.

우리사회의 고령화가 유독 심각한 것은 선진국과 달리 충분한 경제성장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령화 현상은 한마디로 ‘압축적 고령화’라 할 수 있다. 빠른 속도만큼 문제점들이 응축돼 있는데도 국가적 사회적 대비는 여차 구니없을 정도로 허점투성이였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 노인들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가난뱅이로 인정받고 있다.

실제로 고령자 절반가량(48%)은 빈곤층이다. 그런데도 지금 같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된다면 2030년에는 OECD 평균을 넘어선 24.3, 2050년에는 OECD 평균 25.8%를 훨씬 뛰어 넘는 38.2%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인류사회는 인류가 그렇게도 원하던 장수사회를 이룩했다. 그러나 장수사회의 도래는 생산인구의 감소와 부양인구의 증가라는 새로운 문제를 불러 일으켰다. 다시 말하면 세계적인 급속한 고령인구의 증가는 노동력 감소, 저축률과 투자율의 감소를 야기했다.

예컨대 1950년경의 아시아권 노인인구는 5,700만 명으로 4.1%에 불과했다. 하지만 2050년이면 9억 2,270만 명에 이르러 전체인구의 7.1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생산인구가 줄고 고령층이 늘어나다보니 노인부양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노년 부양비는 2010년 15.2%이지만 2040년에는 57.2%, 2060년에는 80.2%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재정지출이 늘면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되

고 노인 빈곤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지역사회,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따라서 과연 한국의 노인들은 위기에 처해 있는가 자녀들은 점점 부모를 모시려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부실하기만 하다. 이런 상황에서 병들고 버림받은 노인들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이 시대의 노인들은 격동의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며 온갖 고통과 역경을 극복한 세대다.

부모에게 효(孝)를 행한 마지막 세대가자 자식들로부터 효를 받지 못하는 최초의 세대이기도 하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그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부채를 지고 있다.

때문에 노인복지에 관한 문제는 당연히 정책 순위의 상위를 차지해야 한다. 따라서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고령사회’의 운영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다.

결코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기업의 생산성이 줄어들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각종 사회보험 운영에 구멍이 생긴다. 돈을 내는 젊은이는 적고, 돈을 타기는 노인만 많으면 보험이든 연금이든 지속 가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국사회의 급속한 고령사회 진행은 젊은이들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에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저출산 대책이 본격화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는 66조5637억 원을 쏟아 부었다. 출산율을 높여서 고령화를 저지하기만 이미 때가 늦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균형 잡힌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리 사회처럼 압축적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준비는 간단치 않다. 그래서 더 치밀하고 배려 깊은 시책이 필요한 것이다.

독일 자동차회사 BMW의 사례는 눈여겨 볼만하다. BMW는 신체 기능이 저하된 고령자를 위해 무릎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나무 바닥을 깔고, 조명을 더 밝히고, 작업장에 확대경을 설치하는 등 크고 작은 70여 개 조치를 취했다.

비용은 5만 달러, 5000만 원 조금 넘는 돈이 들었다. 변화는 놀라웠다. 무엇보다 결근율이 크게 줄어들고 공정의 연간 생산성은 7%가 높아졌다. BMW는 역시 인류기업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고령화에 대비한 혁신인 셈이다.

社說

야외활동시 진드기 조심해야

최근 들어 야생진드기에 물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걸린 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하자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27일 현재 기준으로 SFTS 환자는 92명에 이르렀고 이 중에서 사망자는 8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환자 수는 50% 이상, 사망자는 160% 이상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 SFTS 환자는 2013년 36명, 2014년 55명, 2015년 79명, 2016년 165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사망자는 2013년 17명, 2014년 16명, 2015년 21명, 2016년 19명 등이다.

SFTS는 4월부터 11월 사이에 집중 발생한다. 고열과 오심, 구토, 설사,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을 보인다.

SFTS는 치료제나 백신이 없

다. 따라서 참진드기가 활동하는 시기에는 야외활동을 할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게 최선의 예방책이다.

SFTS 감염자 중에는 농업과 임업에 종사하는 50대 이상의 고령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고위험군은 감염되면 사망률이 높은 만큼,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2013~2016년 역학조사 분석결과를 보면, SFTS 사망자의 평균 연령은 72.9세로 전체 환자 평균 연령 62.9세보다 10세 정도 많았다.

바깥에서 일할 때는 작업복과 장갑, 장화를 착용하고, 등산을 가거나 벌초를 할 때도 긴 옷을 입고, 외출 후에는 몸을 씻는 등 진드기 예방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또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 소화가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이 있을 때는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가 진료를 받아야 할 것이다.

기고



김영우 한국노총 전남상담소장

적폐청산=정치보복

독일은 아직도 과거청산이 진행형이며 과거사 청산을 다음세대에 계까지 전승해 주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반면, 이승만은 미군정하에서 친일파와 손을 잡고 반민특위를 해체하면서 친일파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따라서 친일파가 다시 우리사회 주류가 되었고 그 후유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박정희는 5·16쿠데타 이후 민정이양을 약속했지만 군부만 민간인복으로 바뀌었으며, 권력을 잡은 후 부터는 선거 때만 되면 북한군이 진전배치 되었다면서 전쟁이 터질 것처럼 국민을 겁박하였고, 대한민국헌법을 부정하는 유신헌법으로 영구집권까지 계획했다.

반민주 헌법인 유신헌법은 몇몇 헌법학자의 초안을 당시 신참검사 김기춘이 정리하였으며, 1992년 14대 대통령선거간 중 부산 초원복집에서는 당시 법무장관 김기춘이 주동하여 부산시장, 경찰청장, 안기부관계자들이 모여 “우리가 남이 가?”, “이번에 안 되면 영도대에 빠져죽자”, “민간에서 지역감정을

부추겨야” 등의 비열하고 추잡한 지역감정을 조장하려는 모함이 다 른 당 관계자들에 의하여 발각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더러운 모함의 부도덕성은 철저히 감추고 불순한 모임을 알렸던 부분이 잘못인양 매도하여 모임을 주도했던 김기춘에게는 죄도 묻지 않은 채 경상도지역의 지역감정을 자극하여 선거는 큰 성공을 거두게 된다.

공작정치의 대가 김기춘은 정운회를 비롯 문교계인방의 국정농단을 짜라시로 치부하고 오히려 초원복집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문건유출자에게 죄를 뒤집어씌웠지만 결국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이어져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초유의 사태로 막을 내렸다. 김기춘은 대공, 공안, 검찰총장, 법무장관, 비서실장 등의 요직을 거치면서 정당한 공권력 행사보다는 민청학련사건, 김기춘 유서대필사건 등 수많은 사건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조작하면서 온갖 부정을 저질렀다.

이제라도 악의 축인 김기춘에

의해 유명을 달리하고 회생당한 많은 사람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철저한조사로 적폐를 청산해야 할 것이다. 2012년 대선댓글사건, 북방한계선관련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조작사건,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세월호사건 또한 적폐청산의 중대사건이다.

보수를 가장한 적폐들에 의해 표현에 제갈을 물렸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역시 또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적폐중의 적폐다. 거대야당은 검찰이 조사한 사건을 들춘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정치검찰에 편승했던 조사를 그냥 덮고 넘어가서는 안된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자원외교, 방위사업비리 등의 재조사도 무려 국민80%가 찬성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은 영수증도 첨부하지 않는 업무추진비다. 청와대는 내년부터 특수활동비를 올해보다 31%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 광역단체장의 한해 업무추진비도 100여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기초지자체는 행사부 지출에 따른 공개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으며 지방의회역시 공개하는 곳보다 공개 않는 곳이 훨씬 많다고 한다. 공공기관과 광역, 지자체의 관용차사용부터 선심성 국외여행 등은 오히려 관행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부를 축적하고 편법승계와 온갖 비리의 온상인 재벌적폐를 해결하지 않고는 일터의 미래가 없다.

원 청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임금구조는 산업계의 암 덩어리다. 원가절감의 명분으로 하청사의 저임금 구조를 유지하면서 원 청사의 이익을 추구하고 불공정거래 일감몰아주기가 지속되는 한 대한민국의 산업기반이 언제 화약고로 변할지 모른다.

감세혜택으로 700조의 유보금을 공간에 쌓아두면서 일자리 늘리는 데는 강 건너 불 보듯 한 재벌적폐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새 정부출발 이후 정부가 부처와 재벌들이 경쟁적으로 개혁을 하겠다고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난리법석이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적폐청산을 하면 협치는 물거품이 된다면서 협박을 일삼고 있다.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는 등식인데 이런 생각자체도 청산대상 중의 하나다. 과거 민주정부 10년의 실정을 교훈삼아 죽어야 산다는 각오로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여부가 적폐청산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逐	뜻	추	逐物意移
物	물건	물	
意	뜻	의	
移	옮길	이	

▷ 뜻: 마음이 불안함은 욕심이 있어서 그러함. 너무 욕심 내면 마음도 변함.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원간)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본사: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취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010-5330-5533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재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겸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